

2022.4  
vol. 01

# 함께 봐요 안전보건



01

## 산업안전보건 동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한국노총 입장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의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동향
- 근골격계 6대 다빈도 상병 추정 원칙 제도 관련 동향

02

## 중대산업재해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중대재해 현황

03

## 산업재해 예방

-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 의무 관련 정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04

## 산업재해 보상

-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법제화에 따른 온전한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





# 산업안전보건 동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한국노총 입장

-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였다.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적 시행에 맞추어 기업은 법적 대응과 책임회피에 힘을 쏟기보다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법 제정 취지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산재 감소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 한국노총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교육, 홍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에 집중할 것이다. 후퇴한 중대재해 처벌법의 실효성을 되살리기 위해 경영책임자 정의를 바로 잡고, 5명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 활동에도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다.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의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동향



- 2017년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되어, 휴게시설 설치 우선 적용대상, 휴게시설 면적 및 위치, 관리방법 등 세부기준이 제시되었다.
- 2018년 고용노동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제작 및 배포하였으나,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가 열악한 휴게시설에서 휴식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적 제도화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후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어,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적 근거로 마련하였다. 본법은 2022년 8월 18일에 시행되며 하위법령 마련이 시급해졌다.
- 2021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를 통해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노동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제시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전 사업장 대상 휴게시설 설치, 1인당 휴게시설 단위면적 규정 마련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하위법령(안)은 입법예고 준비 중이며 올 상반기 중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 근골격계 6대 다빈도 상병 추정 원칙 제도 관련 동향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노동자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7월 근골격계 6대 다빈도 상병에 대한 재해조사 요령(추정의 원칙)을 공단 지침으로 마련하였다.
- 그러나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으로 인해 공단 지침을 고용노동부 고시로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현재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심의 중이며 올 상반기 중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 근골격계 6대 다빈도 상병 :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파열, 요추간판탈출증, 반월상연골파열, 수근관증후군, 상과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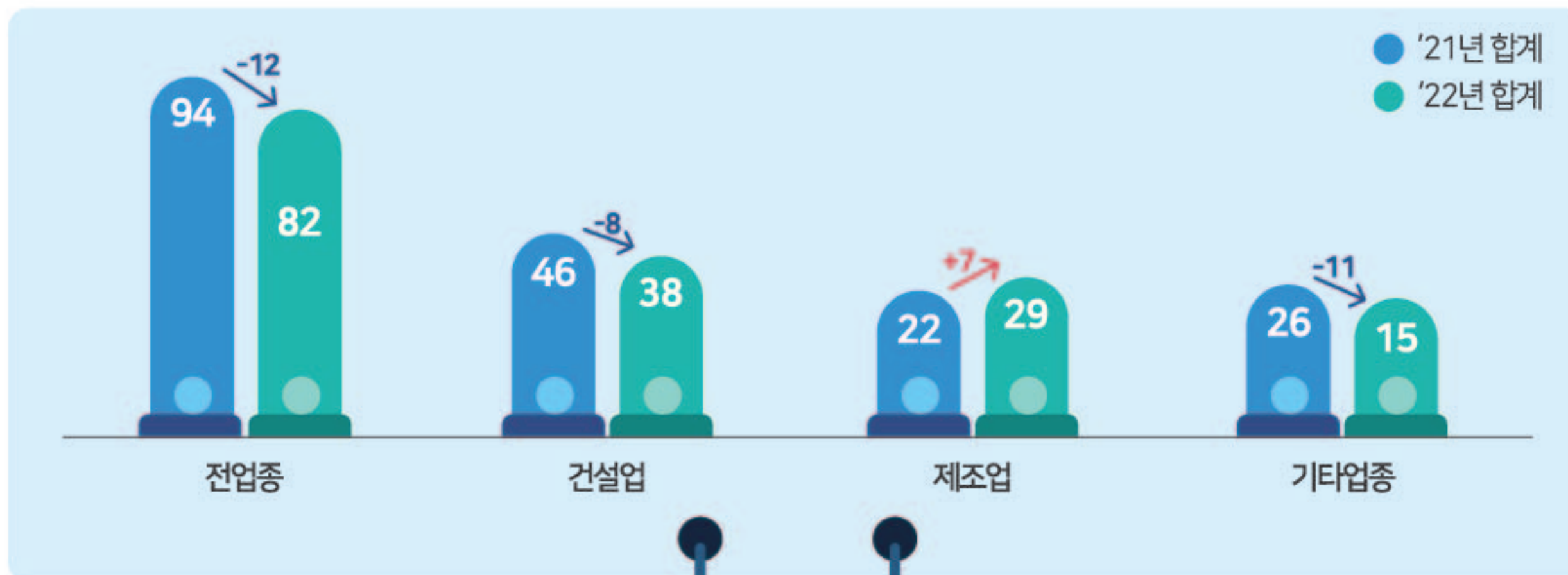
# 중대산업재해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중대재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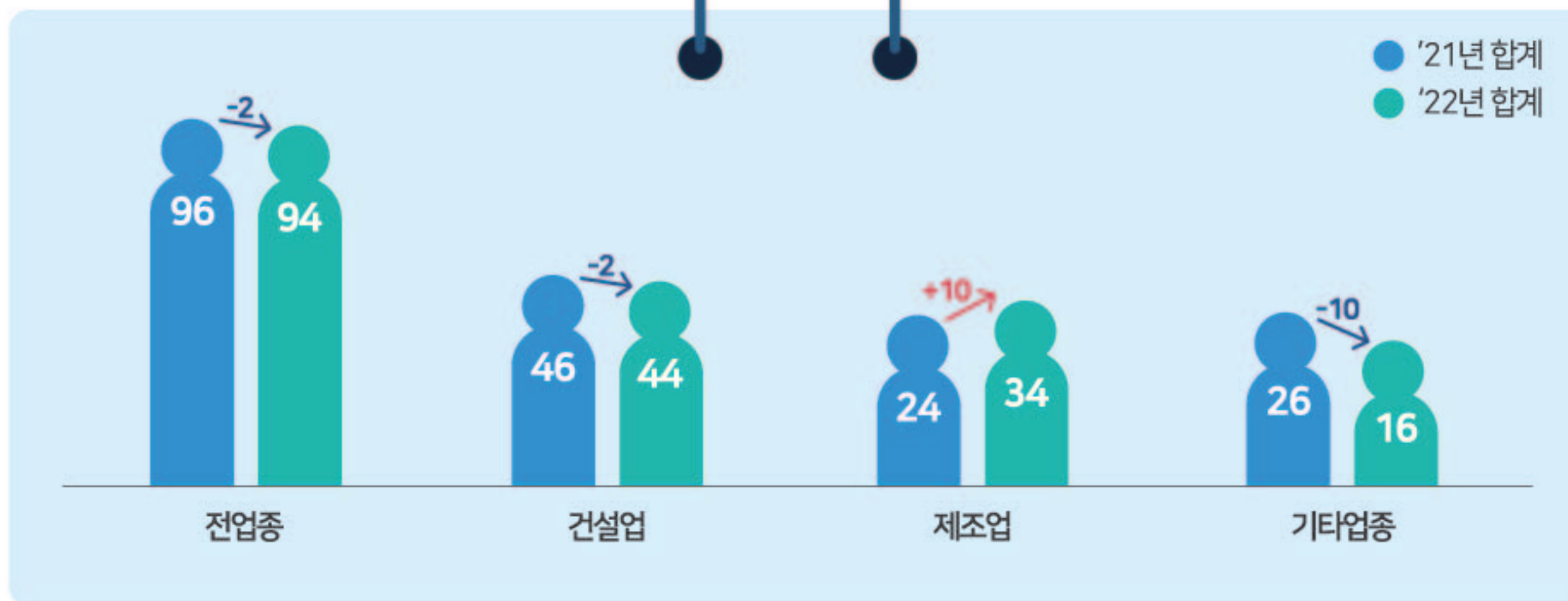
### 사망사고 건수(건)

출처: 고용노동부



### 사망자수(명)

출처: 고용노동부



● '21년 1월 1일 ~ 2월 26일 산재 사망사고 및 사망자 ● '22년 1월 1일 ~ 2월 26일 산재 사망사고 및 사망자

- 2022.1.1~2.26 사망사고는 82건, 전년 동기(94건) 대비하여 12건 감소(12.8%)하였으며 사망자 수는 94명으로 전년 동기(96명) 대비하여 2명 감소(2.1%) 하였음
- 이러한 통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서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하여 명절을 전후하여 자체휴업 및 안전점검 등을 길게 가진 영향으로 보임
- 특히 중대재해가 다발로 발생하는 업종인 건설업에서 큰 폭(53.3) 감소(30건→14건)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에 추후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사고 및 사망자수가 50인 이상 사업장 보다 많은 것을 볼 때 2024.1.27.까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산업재해 예방



##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 의무 관련 정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정부(안)의 문제점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사업주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본법은 2022년 8월 18일에 시행된다.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 하위법령 마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1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규모를 상시 노동자 수 20명 이상으로 규정한다.

#### ! 문제점

- 전체 270만개 사업장 중 상시 노동자 수 20명 이상인 사업장은 5.9%에 불과하며, 이는 대부분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법적 근거로 마련한 것과 같음
- 휴게시설 설치 필수 직종을 규정함과 동시에 상시 노동자 수로 제한을 두어 휴게시설 설치 사각지대 발생 우려



2

휴게시설에 대한 최소면적만 규정하고 기존에 논의된 1인당 단위면적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면적과 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규칙 별표에 마련하겠다.

#### ! 문제점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휴게시설 면적과 개소를 설치하도록 하면 법 자체가 사문화될 가능성 큼
- 사업주는 규정에 따라 휴게시설에 대한 최소 면적만을 확보하는 면피성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 한국노총의 개선방향

한국노총은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의 하위법령(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1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2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휴게 시설 1인당 단위면적 기준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산업재해 보상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법제화에 따른 온전한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



## 1 근골격계질환 산재 처리지연 문제

2021년 업무상 질병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은 전체 질병 24,871건 중 50.1%(12,449건)를 차지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113.0일로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신속한 치료, 요양 및 재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제도 도입 목적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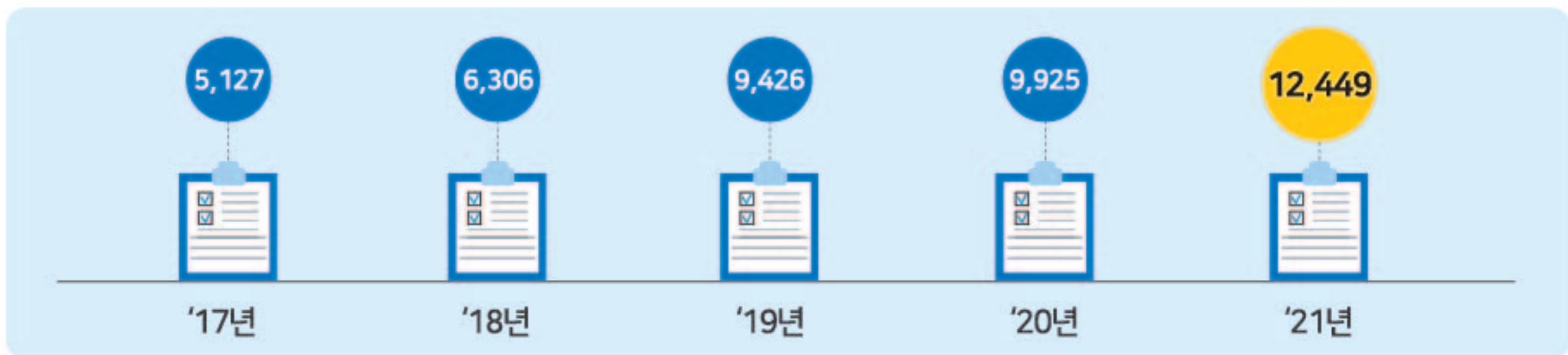
### • 목적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7월 근골격계 6대 다빈도 상병에 대한 재해조사 요령(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을 마련하였다.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은 공단 지침에서 규정한 진단명(근골격계 6대 상병), 직종, 직력, 유효기간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으로써 질병 판정 처리기간 단축 및 심의 신속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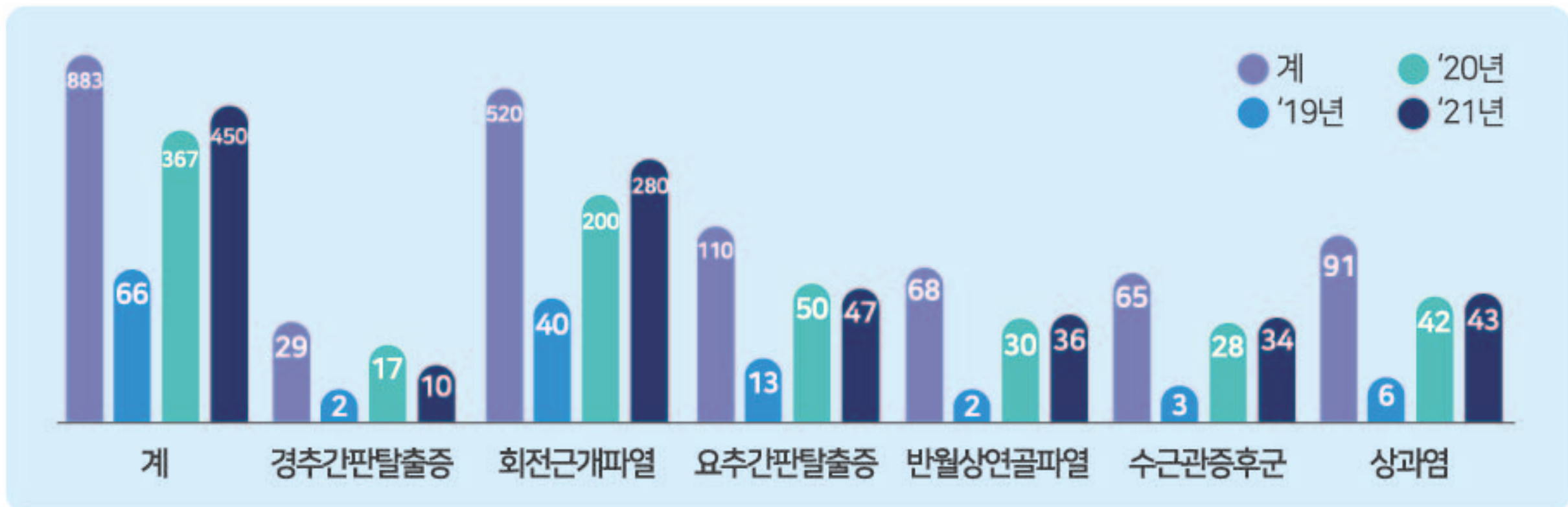
### • 현황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적용 실태를 살펴보면, 2021년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 건수 12,449건 중 450건(3.6%)에 불과하다.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해가 지나도 추정의 원칙 적용 건수는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 연도별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 현황(건)



### 근골격계 6대 다빈도 상병별 추정의 원칙 적용 건수(건)







### 3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제도의 한계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제도가 마련되어,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근골격계 6대 다빈도 상병을 포함한 다른 질병이 동반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 진단명, 직종, 직력, 유효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제한적 조건 등으로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부합되는 건수는 절대적으로 적다.



### 4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고시화 추진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적용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지침을 "고시화"하여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신속한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추정의 원칙 적용 근골격계 6대 다빈도 상병(주상병)에 의해 파생되거나 연관되어 발생하는 세부 상병(동일부위 상병)의 범위를 확대·개정한 것은 추정의 원칙제도운영 활성화에 진일보한 면이 있다. 그러나 추정의 원칙 적용 심의건 산재 승인율 80% 미달 직종 제외, 추정의 원칙 적용 건수 저조 등의 이유로 기존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이었던 직종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고시 개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의견



1 직종의 불분명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정의 원칙 적용 건수가 저조한 현 상황에서 기존 직종을 제외하지 말고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근골격계 부담이 있는 직종을 적극 발굴하여 추정의 원칙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임상의, 직환의, 인간공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을 직종별이 아닌 근골격계 부담직업별로 분류함으로써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근로복지공단은 추정의 원칙 심의건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재해조사 절차를 거치고 있으므로 추정의 원칙 적용 심의건이 또다시 판정위원회를 거쳐 충족 여부를 재검토·판단하는 절차는 산재 처리기간을 증가시키는 비효율적 운영 절차이다. 따라서, 추정의 원칙 적용 심의건은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고 공단의 의결 권한을 강화하여 진단명, 직종, 직력, 유효기간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공단 소속기관에서 산재 유무를 일괄 판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